

### 소음 고통 극심한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분노

# “냉방비 지원 우리만 쏙 빼니 열 받네요”

#### 전기요금 지원 늘린 국토부 “군공항 주변 지원 근거 없다”

#### “1년 내내 창문도 못 열고 사는데”...수 만 가구 불만 고조

“아내와 큰 소리로 언쟁하다가도 전투기가 집 주변을 선회하면 말 다름을 바로 멈춥니다. 소음에 문혀 아무 소리도 안들리니까요. 1년 내내 소음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상서 제외라뇨.”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국 공항 주변 주거시설(주택, 오피스텔 등)에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5만원)를 4개월 간 지원한다.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지역이 제외돼 광산구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법에 군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측은 “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이와 관련, “민간 공항보다 군 공항 소음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데, 군 공항 주변 주거시설은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법이 최근 개정돼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기간·대상을 늘렸음에도 광주공항 인근은 빼졌다. 국토부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을 고쳐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렸고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지원대상은 ▲김포 7만 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7가구 등 모두 7만6000여 가구다.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민간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더 큰 공항을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소음피해 기준(75 WECPNL·웨클)을 웃돌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기준 광주 항공기소음측정망(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지점 7곳의 항공기소음도(단위, WECPNL·웨클)는 ▲광주환경시설공단 77.58웨클 ▲서구 덕흥동 77.02웨클 ▲서구 벽진동(마산경로당) 75.13웨클 ▲광산구 우산동 88.41웨

클 ▲광산구 송대동 88.28웨클 ▲광산구 본덕동 76.65웨클 ▲광산구 송정동 77.91웨클 등이다.

해당 측정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광산구주민대책위’측은 “최소 수만 가구 이상이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광산구주민대책위 국강현 위원장은 “33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 피해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서 “군부대 측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을 지원한다며 체력단련장을 개방했는데, 이마저도 무효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관련법에 따라 전국 민간공항 주변 주거시설에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키로 했지만 광주 군 공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평주일보 자료사진>

## 박근혜·이재용 선고 생중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범법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1일자로 시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할 경우에도 중계방승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 억울한 옥살이 10년...8억6000만원 보상

#### ‘악촌 오거리 살인’ 누명 30대에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 이른바 ‘악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5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 법에 따라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 씨는 10여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악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기회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무안 대형 피트니스 클럽 돌연 영업 중단 잇단 피해

## 전날까지 회원 모집...40여명 고소장

전남의 한 대형 피트니스클럽이 신규 회원 모집을 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무안군 삼향읍의 모 피트니스 클럽은 지난 14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알렸다.

일부 회원들은 피트니스 클럽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가 봤으나 ‘건기 공사 문제로 금일 헬스장을 휴관한다’는 안내문만 붙여 있었다. 실내 장비 곳곳에는 일명 ‘입류 딱지’도 붙여 있었다.

이 피트니스클럽은 수개월째 관리비 등을 미납해 지난 14일부터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을 닫기 하루 전까지도 3~4개월짜리 신규 회원 등록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트니스 클럽의 전체 회원은 700여명 규모로, 직원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회원 40여명이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운영자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무안=임동형기자 idh@kwangju.co.kr

#### 채팅 통해 사린 여친 변심했다며 모델 잠금하고 폭행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사린 여친의 변심을 견디지 못하고 모델에서 잠금·폭행한 20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씨(26)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에 광주 서구 우산동 한 모텔에서 여친 친구인 A(20)씨를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제외한 팔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때

리고, 같은 날 밤 10시까지 모텔에 잠금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지난해 무작위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인연에 살고 있던 A씨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했다”면서 “최근 A씨에게 경기도에 사는 남자친구가 생겨 화가 나 때리기는 했지만, 강제로 잠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

/김현기자 young@kwangju.co.kr

##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여부 헌재서 가린다

#### “국민 이익 침해” 신청 받은 군산지원 “입법자가 요금 정해야”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는 A씨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중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 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헌전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8565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정부의 지배를 받는 헌전이 전기료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금에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이유로 해당 전기사업법의 헌법 위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연합뉴스

#### 커피 프랜차이즈 신화

#### 강훈 대표 숨진 채 발견

커피 ‘할리스’, ‘카페네네’, ‘망고식스’를 이끌어 ‘커피왕’으로 알려진 강훈(49) KH 컴퍼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전날 오후 5시50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것을 회사 직원이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 대표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회생개시절차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많이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최근 반포동으로 이사해 월세를 내며 원룸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했으며 2008년 ‘카페네네’로 옮긴 후 2010년 사장이자 대표 회사 성장을 이끈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b>[아파트]</b>					
2016타경 21894	1	광산구 월곡신정로80, 13동 8층 807호 [월곡동, 하남금호타운] 74.0㎡	아파트	158,000,000	2017타경2739[중도호출, 하남금호타운] 158,000,000
<b>[연립주택/다세대/빌라]</b>					
2016타경 16625	1	서구 문전로162번길43-5, 3층 304호 25.75㎡	다세대	26,600,000	현관호수표시305㎡ 26,600,000호
2016타경 19655	1	북구 일곡마을로133, 2층 201호 [일곡동, 북우오성빌라] 60.585㎡ [토지별도 등기있음]	다세대	158,000,000	건축물현황도상20㎡ 2로로기제
	2	동소 133, 2층 202호 [일곡동, 북우오성빌라] 60.585㎡	다세대	158,000,000	건축물현황도상20㎡ 2로로기제
<b>[대지/임야/전답]</b>					
2016타경 19983	1	화순군 동면 북막리 480 701㎡ [민집지외경계불분명, 측량요, 수목및물타리매각제외]	전	29,4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영지이나소속의도있음
	2	동소 483 545㎡ [맹지, 수목및물타리매각제외]	전	19,6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b>[자동차, 중기]</b>					
2017타경 4322	1	사용번호지:여수시 여수산단로140 [주상동, 내트럭하우스109호]등록번호:전남80바7356 차량:대우22.5톤장축카고트럭 연식:2008	자동차	30,000,000	보관장소:제3차하 나로F엔C, 광주서구금호동531
2017타경 8836	1	사용번호지:목포시 현행동로 17 [상동] 등 등록번호:08라0664 차량:쓰르라 연식:2016	자동차	21,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 현대차주장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b>[기타]</b>					
2016타경 66255	1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428 192㎡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본길 30-29 40.1㎡ [제외의 창고 등 53.6㎡]	대	18,888,5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2017타경60063[병합]
	2	북구 양산동 254-129 82㎡ [김현진1921/680]	도로	3,748,32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3	동소 254-141 48㎡ [김현진1921/680]	도로	2,194,13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4	동소 254-142 242㎡ [김현진1921/680]	도로	11,062,11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5	동소 254-143 209㎡ [김현진1921/680]	도로	9,553,64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6	동소 254-145 50㎡ [김현진1921/680]	도로	2,285,56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7	동소 254-147 278㎡ [김현진1921/680]	도로	12,707,71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8	동소 254-149 287㎡ [김현진1921/680]	도로	13,524,03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9	동소 254-150 298㎡ [김현진1921/680]	도로	14,042,37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7타경 996	1	나주시 경현동 561-1 1983㎡ 나주시 금성산길 14 1동호 1층260.08㎡ 2층226.76㎡ 3층226.48㎡ 4층226.48㎡ 동소 14 2동호 1층130.8㎡ 2층130.8㎡ 3층130.8㎡ 제외의 다용도실 등 24.6㎡	대	1,771,925,8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별지기제3-3]포함, 단락제외의 기타제외외건물 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대수신고인인 매각물건기원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수 대상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당할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인사정행방 제140조에 의한 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집행되는 매각회차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집행 부분상의 매각기원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원해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8. 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8. 16.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1. 입찰일정에 비추어 기입입찰표에 사견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부내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5% [미선정]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약책을 제공하는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찰행위의 투입이 종료된 후라도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대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차별한 다른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4. 최고대수신고인과 최저대수신고인만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결과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견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과 매각일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출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일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료 유예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처리를 위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 수 있다.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편방식으로 입찰신청[신청]과에서 전자신청해나 비현상 송부할 수 있음으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신청에 나오는 설명에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입찰보증금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매각특약사항에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대수신고인만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여야 하며 고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으로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집행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과 공고하는 물건의 매각기일이 해당되는 물건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도 하지 않으므로 우편방을 계서면 의 공고나 방명록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법정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정보] -> 매각공고 선택

○ 입찰을 종료하기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방의 위법으로 위헌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산입되지 않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외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사법부좌관 모창환